옹산 스님(경허 · 만공선양회장)
만공선사 一喝은 총칼과
서슬퍼런 권력 뛰어넘어
4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6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57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불교 독립운동 등록 문화재 2% 불과

광복 70주년 맞아 비조명 스님 발굴 목소리 높아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의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근대문화재 지정에 대한 관심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화과원 국가사적지정추진위원회(위원장 진종삼)는 7월 24일 창원 아리랑호텔에서 불교계 · 학계 · 재계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용성 스님의 상해임시정부 자금지원시설인 함양 백운산 '화과원(華果院)' 의 국가사적 추진을 선포했다.

이날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진종삼 前경남도의회 의장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의 중심이 된 곳이 아무런 복원대책이나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뜻모았다"고 말했다.

함양 화과원은 함양군 백운산 일대 농장으로, 용성 스님이 스님들이 참선하며 일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 불교운동을 펼친 곳이다. 기미독립선언 민족대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용성 스님은 해외독립운동 자금공급을 위해 화과원에 수만 주의 과수를 심고 수확한 과일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함양군에서 발간한 〈함양문화대전〉에는 건물 16동에 스님 수십명이 기거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용성 스님이 거주했던 곳에 전각 1채만이 지어져 있다.

화과원 원장 혜원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화과원 부지도 팔려 분산됐다"고 말했다. 혜원 스님은 용성 스님 수제자인 동헌 스님의 법제자로 유지를 받들어 1991년부터 화과원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법당터와 선방터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화과원의 경우도 다른 독립운동 관련 근대문화재 현황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48건. 이 중 불교관련 근대문화재는 총 30건으로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세부적으로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458호), '구리 한용운 묘소' (519호), 백용성 역 조선글 화엄경(629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630호),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631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632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637호),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646호) 등 8건으로, 전체 등록 근대문화재의 2%에 불과한 수치다.

문도들이 현재 불교계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용성문도회와 선양사업을 진행 중인 경허 · 만공 선양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문도들의 관심에서 빗겨간 곳은 보존관리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실례로 만해 스님이 기독교, 천도교계와 3.1운동의 물밑 작업을 했던 계동43번지 '유심사' 는 현재 민간 소유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월간지 〈유심〉을 발행하고 독립선언 하루 전날, 중앙학림 유심회 학생들을 불러 모아 독립선언서 3000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독립운동 등록문화재
용성 스님 유물 다수
만해 스님의 '유심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비조명 인사 발굴해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무엇보다 자료 수집, 발굴 등이 중요하다"며 "여건 상 조명받지 못하는 근현대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우봉 스님의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 중인 법주사 도봉 스님은 "우봉 스님은 만당비밀결사를 조직해 해마다 쌀 500석을 독립군에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거자료가 관건"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봉 스님의 선양사업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과 전주이씨익녕군파종회(이사장 이완호)의 공적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불교계가 장기적으로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료 발굴과 수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인 보광 스님은 "근대 불교계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방치한다면 결국 스스로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며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는 8월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 · 24 대북제재 조치를 과감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8.15,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불교단체연석회의, 8월 6일 기자회견

"이미 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된 대북제재 수단인 5 · 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계 사회단체들이 8 · 15 광복을 맞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통일사업 전개를 촉구했다.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는 8월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 · 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더프라미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여성개발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는 7월 15일 결성돼 '광복 70년 조국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성사를 위한 기도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 에서 "5 · 24조치가 시행된지 5년이 넘어서며 남북경협 사업자들이나 대북인도 지원사업자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미 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5.24 제재 해제 촉구
통일사업 추진방침 밝혀
8.15 남북공동법회 개최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8 · 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올해 8 · 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전준호 회장과 신창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이사 등은 입장문을 통일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8월 8일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오가는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열차' 행사와 11일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강연 –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중국 선양 회동 후 추진되던 8 · 15남북합동법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이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은 "실무접촉 무산으로 15일 오전 10시 남북동시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특집 섹션 | 광복 70년 불교 70년 B1~8면

다시 뽑아든 '종교인 과세' 47년 논란 마침표 찍나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종교인 항목 신설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
비과세율도 명목화해
불교 "과세 찬성 입장"

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 카드를 뽑아들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였지만 47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이어진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는 내년부터 종교인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국회가 종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매번 미뤘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 기준은 지난해 종교계 대표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절충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을 근거로 했다.

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시행령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항목에 넣었다.

징수 방법인 '원천징수' 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종교인들이 원천징수 자체를 '세무 사찰' 이라며 부담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세율도 소득 격차가 심한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을 적용했다. 연 4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연 4000만~8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60%, 8000만~1억5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40%를 공제한다.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종교인은 20%만 공제된다.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공론화된 때는 1968년이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 뒤 추진돼 왔지만 종교계 반발이 거세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넣으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방침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현재 불교계는 과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면서 "세법 개정안이 나온 만큼 종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고

새 우편번호 전면 시행 따른 일괄전환 안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를 애독해주시는 독자 제호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법 시행령' 에 의거 5자리 새 우편번호로 전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지에 등록된 독자님들의 우편번호도 원할한 배송을 위해 새 우편번호로 변경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화 된 주소가 아닌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독자님들은 '도로명 주소' 로 변경 신청 바랍니다.

변경신청 문의 (02)2004-8212

법어가 담긴

120

1000

1 20년

음

대

A set		
B set		
C set		

2 1 9000 3 (2 0 0 0) 구

불 02)2004-821

053-01-269062 (주) 대 불 신